

# 대기업, 출자구조 단순화 일부 진전 지배구조 투명성은 여전히 ‘과제’

공정위,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  
공시집단 절반 지주회사 체제 전환  
국의 계열사 통한 우회 출자 여전히  
체제 밖 계열사 ‘옥상옥’ 지배 우려

국내 대기업 집단의 약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출자 구조의 단순화와 투명성은 일정 부분 진전됐지만,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45개로 집계됐다. 2016년 첫 분석 당시 8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규모로,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지주회사 체제는 수평·방사형 출자 금지, 출자 단계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을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4.6단계)보다 낮았다.

소유 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

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지분율은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48개 국외 계열사가 4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사례는 총 76건으로, 전년대보다 증가했다. 롯데, SK, LX, 동원, 원익 등의 집단에서 국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지주회사나 그 자·손자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에 달했다.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의 직접적인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재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3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6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지분율은 9.97%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80%를 웃돌았고, 절반 이상에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를 두고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상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옥상옥’ 구조로 평가했다. 국외 계열사와 체

제 밖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6.0%에서 올해 12.35%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38%로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집단별로는 반도체·IT·화학·에너지·제조업 등 일부 업종이 크게 줄었으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익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의 매출 가운데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1.5%로 절반을 넘었다. 농심홀딩스(100%), 티와이홀딩스(99.9%), 오씨아이홀딩스(96.0%) 등 일부 지주회사는 매출 대부분을 배당에 의존하고 있었고, 반대로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17.1%) 등 배당 비중이 30% 미만인 곳도 존재해 집단 간 편차가 있었다.

배당 외 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의 상표권 수익은 전체 매출의 평균 13.0%를 차지했고, 합계액은 1조4040억원으로 전년대보다 534억원 증가했다. LG, SK, CJ, 롯데, GS 순으로 상표권 수익 규모가 컸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제조업 반등… 작년 지역경제 2% 성장

데이터처, 지역소득 잠정치 발표

지난해 국내 지역경제 규모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2%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3일 발표한 ‘2024년 지역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1년 전보다 2.0% 늘었다. 제조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의 생산이 증가한 영향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지역내총생산에서 가격이 오르내린 부분을 제하고 생산량이 바뀐 분만큼 구한 것으로, 경제성장률을 산정할 때 쓴다.

실질 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감소(-0.6%)했으나, 이듬해 회복해 2021년 4.5%, 2022년 2.7%, 2023년 1.4%, 2024년 2.0%로 4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2.4%, 비수도권은 1.6% 각각 성장했

다. 수도권 성장률이 비수도권보다 0.8%p 이유는 반도체, 전자부품, 의약품 등의 생산 증가로 경기와 인천의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실질 성장률은 경기(3.6%), 울산(3.4%), 전남(3.4%) 등이 제조업과 운수업 증가에 힘입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충북(-1.5%), 대구(-0.8%)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활동별 성장률을 보면 전국 전기·가스·열 공급업(5.1%), 광업·제조업(4.2%), 서비스업(1.5%), 농림어업(0.9%)은 전년 대비 증가를 보였고 건설업(-3.0%)은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 지표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역총소득은 2598조원으로 전년 대비 151조원(6.2%) 증가했다. 지역총소득은 지역내총생산에서 지역 외로부터 순수하게 취한 본원소득을 뜻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해외 건설 수주에 금융·보증지원 강화

무보, 건설공제조합과 업무협약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 및 금융 공동 지원 ▲해외 공사 관련 정보 교류 ▲해외 조직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행성보증은 건설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이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이석용 건설공제조합 이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제공이 해외 건설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월전 및 에너지인프라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AI로 기후재난 대비…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기후부, 국가 기후위기 대응대책  
홍수·폭염·산불 예측에 AI 전면 도입  
댐·도로·주택 등 기반시설 기준 개선  
반지하·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3일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기후부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8개 유관부처·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매 5년 마다 수립해 왔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후위험 영향·취약성 평가,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4차 대책은 지난해 기후위기 적응 국민 포럼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 및 지난달 대국민 토론회를 거친 뒤 최종 결정됐다.

우선 정부는 기후위기 상황을 반영해 국가 기반시설을 혁신한다.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사회 기반시설 설계 기준에 최근의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또 AI 홍수 예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AI 기반으로 12시간 전에 도로 살얼



지난 9월 지속된 가뭄 탓에 강원 강릉 오봉저수지 바닥이 갈라져 있다. /뉴시스

음을 예측한다. 홍수·가뭄에 대비해 인근 댐·저수지 등 물고루를 연계한다. 홍수엔 인근 댐·저수지를 연계해 운영하고, 가뭄 기간엔 물 부족 지역 인근 댐 연계 관로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 민·관·군 합동으로 강력한 초동 진화를 추진한다. 폭염·한파가 발생할 경우 취약계층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 쉼터’도 조성한다. 러브버그 등 최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곤충 대발생에 대비해 실태조사·감시, 방제체계를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도심 유입을 저감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지능형(스마트) 과수원·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

설의 보급을 확대한다. 병해충 저항성·내한성 등 기후적응형 품종을 2030년까지 누적 449종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한다. 또 기후재난으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비축 확보 및 해외 대체 어장 확보 지원,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품목·지역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어려움이 커진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현장 체감도 높은 기후 안전망을 구축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넓힌다. 피해 유형 및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도 추진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공공 매입, 이주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공공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기후보험 도입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후적응협의체 등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계 수요 맞춤형 지원 정책도 수립한다. 또 업종별 기후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하고, 기업에서 직접 기후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교육부, AI 인재양성 중심으로 조직개편

‘인공지능인재지원국’ 신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인공지능 시대 미래인재 양성,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한 국가균형성장 도모, 모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교육 강화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역할을 결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공지능인재지원

국’을 신설한다.

‘인공지능인재지원국’은 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강 국가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미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인재정책실’은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평생정책실’로 변경한다.

지역산업과 국립대·사립대 간의 동반성장 지원,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평생·직업교육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대학정책관’, ‘대학지원관’, ‘평생교육지원관’의 3개 관(국)으로 재구성한다.

/이현진 기자 lhj@